

곡성군, 산지 사육시설 허가 부실행정

곡성에서 산지 사육시설 건립 과정에서 환경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 없이 개발허가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 이후 개발이 진행되면서 산지의 상당 부분이 훼손됐으며, 법규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관련 공무원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곡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 곡성군중립종합·개인사업자 등이 곡성군 입면 제1리 산 36번지(8만여㎡)에 '동·식물 관련 사육시설' 건축 신고와 산지 전용 허가신청을 냈다.

조합 등은 해당 산지 일대에 대규모 곤충·양서류 사육장을 짓겠다고 허가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건축·산지 전용 허가 3개월 개발진행 뒤 중단·해당 공무원 징계 군 "허가 취소·원상 복구 명령 검토 중"

이에 곡성군은 2017년 6월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허가를 승인했다. 이후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해당 개발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며 공사중지를 곡성군에 요청했다.

곡성군은 이같은 사실을 산지 개발을 추진하던 조합 등에 통보, 허가가 난 지 3개월 만에 사육장 건설 공사는 중지됐다. 공사중지 조치 이후 영산강환경

청은 개발 주체인 조합 등과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허가를 승인했다. 이후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해당 개발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며 공사중지를 곡성군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영산강환경청은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지난달 해당 산지 내 건축·산지 전용 허가에 대한 '부동의' 의사를 최종 통보했다.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곡성군은 부랴부랴 허가 취소와 원상 복구 명령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발 공사가 3개월 가량 진행되면서 산지가 상당 부분이 이미 무분별하게 훼손돼 곡성군은 행정 부실 책임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상급기관인 전남도청 감사에서는 2건의 허가에 관여한 군 공무원들이 관련 법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남도의 징계 요구를 수용한 곡성군은 해당 공무원에 신분상 징계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곡성군 관계자는 "관련 행정절차 확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고, 도 감사결과를 받아들여 해당 공무원을 징계했다"며 "환경당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곡성=김광희 기자

광주교육청, '급식실 작업표준서' 제작

광주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급식실 안전보건 작업표준서를 마련, 24일부터 26일까지 일선 급식실에 보급했다.

보급 대상은 공·사립 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교, 단설유치원, 교육연수원과 해양수련원 등 급식실이 있는 직속기관들이다.

학교급식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시행으로 지난해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기관이 됨에 따라 급식소의 산업재해를 막고 직업성 질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과 주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작업표준서에는 학교에서 알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급식실 작업 순서대로 작업전 스트레칭부터

배식완료 후 청소까지 과정별로 일목요연하게 근로자들이 반드시 알아 할 위험 요소와 작업성 질환이 담겨 있다.

그동안 급식소는 각 학교별로 종사인원과 시설여건에 따라 안전보건조치가 학교마다 다르게 운영돼 작업표준화가 시급했다. 이번 작업표준서 보급은 모든 학교가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작업과정별 안전수칙을 매뉴얼화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작업표준서를 통해 일일 안전교육과 위생점검 체크리스트를 함께 보급, 작업시작 전 매일 10분씩 당일 작업의 위험요인과 안전상 주의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조인호 기자

지난해 빗길 교통사고 전년 대비 32% 증가

지난해 빗길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도 26% 늘었다.

2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빗길 교통사고는 총 1만 4545건으로 전년도 3526건보다 32.0% 증가했다.

사망자는 25.9%(72명) 많아진 350명이다.

차대차 사고가 1만442건으로 72%를 차지했다. 사망자의 경우 횡단 중 사고가 20%(70명)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역별 강수량과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비교하면 경기도가 3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3.7건, 경북 10.4건 순이다. 사망자 수는 경기 0.7명, 경북 0.37명, 전남·충남 0.33명, 전북 0.28명 순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젖은 노면에서 제동거리가 평상시보다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감속운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단이 제동거리를 시험한 결과에 따르면 시속 50km로 주행했을 때 젖은 노면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에 비해 최소 1.6배 증가했다.

운행 전 타이어 마모도, 등화장치 등 기본적인 차량상태 점검도 필수다.

실험 결과 시속 60km일 때 타이어가 한계선까지 마모된 경우 새 타이어에 비해 제동거리가 32.2%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자동차검사 분석 결과 등화장치 부적합이 128만 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뉴스



공룡이 살아 움직여요 26일 오전 서울 강서구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주라기 월드 특별전 전시장에서 어린이들이 공룡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수영대회 공사장 노동자 추락사 당시 안전시설 미설치

안전대 연결·고정 추락방지시설 미설치...노동청·경찰 사법처리

최근 노동자가 추락사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주경기장 관람석 증축현장에 추락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광주고용노동청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노동청 산재방지지도 과는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주경기장 증축공사장에 추락 방지 시설인 '안전대 부착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노동청은 공사장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8시41분께 남부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주경기장 관람석 증축현장에서 A(54)씨가 현장 안전망 철거 작업 중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당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안전대와 연결할 수 있는 부착 설비(보호벨트·안전고리 고정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대 부착 설비가 설치되면

노동자가 추락하더라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노동청은 설명했다.

노동청은 사고 당일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해당 공사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지난 20일 설비를 마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작업 재개를 허가했다. 공사는 지난 24일부터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노동청 수사 결과를 통보 받는데로 보강 조사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남규 기자

이런판결 저런판결

법원 "친일파 땅 138필지 중 1필지 국가로 반환하라"

국가가 친일파 후손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정부가 반환을 요구한 땅은 전국 138필지였고, 법원은 이 중 1필지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정부가 이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오후 정부가 이우영 그랜드힐튼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회장이 소유한 전국의 138필지 중 한 곳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고 9억5000여만원과 해당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사건은 2007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재판위원회(반민조사위)가 이해승을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족규명법)에 따라 친일

등을 받았다. 반민조사위는 해당 토지가 일제강점기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이 회장은 2008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구 반민족규명법 2조7호는 '일제로부터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이해승은 후작 지위를 받은 것이 황실의 일원이었기 때문으로 본 것이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규명법 해당 조항에서 '한일합병의 공'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법무부는 2010년 10월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뒤 다시 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고 경기 포천시 신단동 임야 등 토지 192필지(소송 당시 공시지가 114억여원)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내리면서 시작했다.

이해승은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일제의 국권 침탈(한일합병) 이후 1910년 10월 일본으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와 함께 은사금 채 16만8000원, 한국병합기념장

1심은 지난해 8월 반민족규명법이 개정됐더라도 법률 개정은 확정판결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무부에 패소판결을 내렸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건강기관에 문의하십시오.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h-well 국민건강보험 | 콜센터 1577-1000